



윤석열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3면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2면

미국 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평범한 여성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16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4면

노동자·서민에 고통을 전가하는
윤석열의 물가 대책 10면
유류세 인하 부정적,
금리 인상 반대 않는 정의당 11면

윤석열의 경찰 통제 vs 경찰 독립성?
경찰의 부패하고 폭력적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5면

나토 정상회의와
우크라이나 전쟁
6~9면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관련 기사 3면



탈핵, 고임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해야 한다고?

전력 노동자가 전기요금 인상이 부당한 이유를 말한다

윤석열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한덕수 총리는 개혁 대상 1호로 한국전력을 지목했다. 전 정부의 탈핵 정책과 전력 노동자의 고임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엉뚱한 데 책임을 돌렸다. 그리고 임금 반납, 구조조정 등을 하라고 강하게 압력을 넣었다.

한국전력(과 자회사) 사용자 측은 부채를 줄이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자산 매각, 통폐합, 인력감축 등을 예고했다.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이 어떤 변명을 대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안 그래도 폭등한 물가를 더 끌어올려 노동자·서민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낮게 유지해 물가를 통제할 책임이 있다.

전력 노동자들에게 임금 반납,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도 완전히 부당하다.

한전 적자의 원인은 국제 공급망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유가

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노동자들은 유가 폭등에 아무런 책임도 없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면서 전쟁에 가담하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했다. 이것은 나토의 확전과 그로 인한 물가 폭등에 일조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탈핵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라고 말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일관되게 추진하지도 않았다. 수명이 다 된 핵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결정했을 뿐이다. 핵발전은 위험천만한 것인데도 말이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폐쇄로 핵발전소의 발

전량이 일시적으로 줄기는 했지만,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가동으로 발전량을 꾸준히 늘렸다. 따라서 전기요금이 인상될 이유는 없다.

또, 정부는 매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경영 평가로 통제해 왔다. 올해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퍼센트 상승했다. 그런데 올해 공공기관 임금은 고작 0.9퍼센트 인상했다. 실질임금이 삭감된 것이다. 전력 노동자의 고임금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는 말은 터무니없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이 많이 늘어나 노동자를 필요 이

상으로 고용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추진한 ‘가짜 정규직화’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 노동자로 고착화시켰다. 인력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이전부터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노동자였다. 인력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보수 우파뿐 아니라 좌파 일각에서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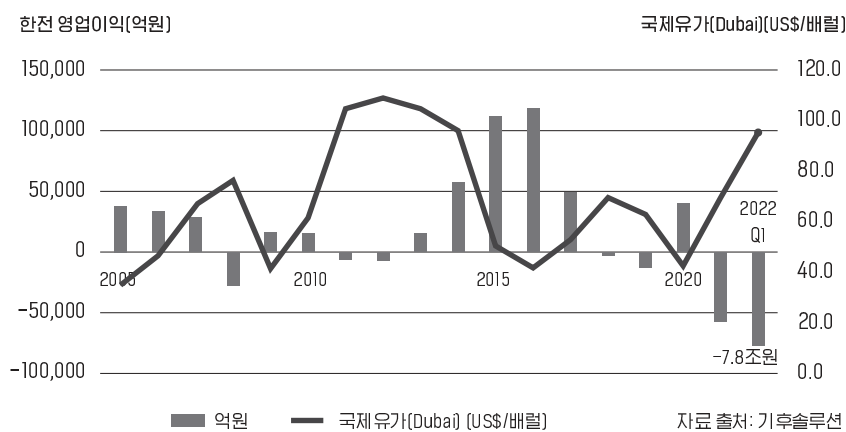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시기에 정부는 노동자·서민을 지원해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업의 적자는 당연히 필요한 “착한 적자”이다.

사실 한전은 지난 10년간 무려 3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공기업인 한전이 노동자·서민을 상대로 돈벌이를 해 온 것이다. 반면, 정부와 한전은 2015~2020년에 국내 50대 기업에는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 전기 요금을 할인해 줬다.

한전의 적자는 전력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호성 한전KDN 노동자

국제 유가와 한전 영업실적 추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민영화, 공공서비스 악화, 노동조건 후퇴

정부가 공공 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윤석열은 공공 기관 부채가 583조 원에 이른다며 거품을 물었다.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윤석열),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한덕수)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공공 기관 부채를 감소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공공 기관의 조직·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복리후생을 축소하고, 공공 기관 사업 가운데 민간 기업과 경합하거나 다른 기관과 겹치는 사업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연공급제(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겠

다고도 한다.

한마디로 긴축을 골자로 한 민영화 추진과 공공 서비스 악화, 노동자 임금과 조건 후퇴 등 신자유주의 공격을 예고한 셈이다.

‘착한 적자’

정부는 공공 기관 부채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해악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그 부채의 상당수는 공공 서비스와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착한 적자’다.

가령, 철도공사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한 해 마다 적자가 1조 2000억 원씩 급격히 증가했다. 좌석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 방침을 준수하며 열차를 운행하면서 적자가 늘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부채가 쌓인 것이다.

반면, 정부는 “공항철도를 비롯한 민자철도의 경우 최소 비용 보장 등의 명목으로 코로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철도노조) 공공 서비스 지원은 나 몰라라 하면서 민간 기업들만 지원해 주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여온 것이다.

최근 국무총리 한덕수가 ‘혁신 대상 1호’로 지목한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올해 1분기 약 8조 원의 적자를 냈고 연간 적자 규모가 최대 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전 적자의 주 원인은 전기를 생산하는 원료 가격 상승이다. 그간 한국의 전기 요금은 OECD 평균보다 낮게 유

지돼 왔는데, 연료비 급등으로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전기는 필수적인 공공재인 만큼, 정부는 노동자·서민이 싼값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수익성 잦대

윤석열 정부는 공공 기관 부채 증가를 빌미로 공공 기관에 수익성 논리를 강화하고, 구조조정과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할 기회로 적극 활용하려 한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전력·철도·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 전기 판매 부문을 민간 기업에 개방하고, 철도 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고용노동부가 6월 23일 발표한 '노동 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노동 규제를 완화해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추진 과제로 노동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노동시간과 임금은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성을 높일 목적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려는 계획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노동부 발표를 놓고 윤석열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하고 말했다. 어처구니없는 책임 회피다.

하지만 임기 시작한 지 한 달만에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돼, 노동계급 대중이 대거 반발할 만한 쟁점에서 눈치를 보는 윤석열 정부의 녹록지 않은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이 말하듯 대통령과 노동부 사이에 내용·기조에서 “엇박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은 이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노동 개혁을 공약했다.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싶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이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바다.

당선 이후에도 이런 기조는 흔들림이 없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5월 3일),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6월 16일)에도 ‘노동 개혁’은 핵심 의제였다.

고통전가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명백하다. 세계적인 경제 불안정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짜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은 이를



기업주들에겐 법인세 깎고 각종 특혜, 노동자들에게엔 고통 전가

잘 보여 준다. 기업주들에게는 법인세를 깎아 주고 규제를 완화해 주는 등 지원을 늘리겠다고 한다. 반면, 고물가 상황에서 생계비가 걱정인 노동자와 서민에게는 되레 공공요금을 올리고, 임금과 소득을 억제하겠다고 한다.

윤석열은 주 52시간제가 연장근무를 원하는 사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서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용을 강조해 왔다. 노동자들에게 연장근무 수당을 덜 주면서 더 혹사시키겠다는 뜻인데, 이를 통해 신규 채용도 줄일 수 있다. 순전히 비용 절감을 통한 이윤 보호를 위해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이다.

정부는 유연근무제가 확대됐지만 활용률이 높지 않다고도 불평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가 2017년 15건에서 지난해 6477건으로 432배 가까이 대폭 늘었는데, 이조차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노동부가 내놓은 노동시간 유

연화 방안은 우선,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무 시간을 월 단위 “관리”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한 달 평균 노동시간이 유지되더라도 그중 한 주는 최대 9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게 된다. 사용자들이 일의 양에 따라 초과 수당 지급 없이 효율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선택근로제 단위(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늘리겠다고도 한다. 현행법상 선택근로제는 일간·주간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다. 하루 24시간, 주 120시간 노동도 가능하다.

이것이 노동자의 건강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다. 노동시간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기본 단위가 길어질수록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해 왔다. 월 단위, 심지어 연간 단위가 아니라 주간 단위의 노동시간을

정해야 하고, 특히 하루 노동시간의 길이를 제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성과 경쟁

이번에 노동부가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도 노골적인 착취 강화 의도를 담고 있다.

정부는 “(현행) 연공성 임금체계는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호황기에 젊은 노동자들에게 ‘평생 고용’을 약속하면서 저임금 장기근속을 유도하려고 도입한 연공급제(호봉제)가 바로 그 청년 노동자들의 대거 퇴직이 다가오자 이제 부담스러워진 것이다.

그래서 매년 파박파박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개별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로 개악하겠다는 것이다. 고용 불안의 시대에 더 나을 듯 보여도, 직무성과급제는 노동자들을 성과 경쟁으로 내몰아 임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경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지배자들이 단단하게 뭉쳐 있는 것은 아니다. 정권 초부터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 위기가 커서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낮다.

관건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광범하게 단결해 투쟁하느냐에 있다. 민주노총의 조직된 노조들이 흔히 보이는 태도, 즉 ‘우리는 단체협약과 조직력을 통해 조건을 지킬 수 있다’는 식의 부문주의적 접근으로는 노동 개혁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어렵다.

연대 투쟁을 위한 단결의 정치가 절실하다.

박설

영과 시설의 분리를 더욱 강화하고, 민간 병원들의 영역을 넓히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이다.

민영화는 공공 서비스에 수익성 논리를 강화해 요금 인상과 서비스질 하락을 불러 온다. 민간 기업들에게는 돈벌이 수단을 제공하는 대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비용 부담 등 고통을 주는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 기관에 대

한 경영평가 기준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기준에서 공공성 항목을 줄이고 수익성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재무 성과 비중을 높이고 기능·인력 조정 등 생산성 제고 노력을 성과급과 연동시키겠다고 한다.

이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긴축 정책의 일환이다. 깊어지는 경제 위기에 직면해 공공 부문부터 부채와 비용을 줄여 나가며 위기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

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 기관의 ‘생산성 저하’와 ‘고임금’을 비난하고 나선 것도 이런 공격의 일환이다.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강도 높은 공공 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했지만, 이것이 뜻대로 관철되리란 보장은 없다.

역대 정부들이 추진한 신자유주의 긴

축과 민영화 정책과 이로 인한 고통 때문에, 이에 대한 노동계급의 반감이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면서도 한사코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는 이유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시작도 성과연봉제 강행에 맞선 공공 기관 노동자 파업이었다.

민영화,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이 중요한 이유다.

신정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낙태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미국 연방 대법원이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여성의 자유에 대한 악랄한 공격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결정은 시대의 변화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징후다.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된다. 첫째, 이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보자. 미국의 우익은 이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수십 년간 일을 꾸며 왔다. 미국이 온전한 민주주의가 아닌 이유 하나는 헌법이 선출된 대표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명한 종신 연방 대법관 9명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우익은 연방 대법원을 물갈이하려 했다. 자유주의 역사가인 티머시 스나이더는 공화당을 “두 세력의 연합”으로 묘사한다. “한 세력은 체제를 이용해 먹으려는 자들이고 … 다른 한 세력은 체제를 깨뜨리려는 자들이다.”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과 도널드 트럼프의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는 “체제를 이용해 먹으려는 자들”에 해당하고,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은 “체제를 깨뜨리려는 자들”에 해당한다.

두 세력이 힘을 합쳐 연방 대법원을 장악했다. 오바마가 임기 말에 연방 대법관 공석을 민주당 쪽 인사로 채우려고 여느 때처럼 무기력하게 움직였을 때 매코널은 그 시도를 저지했다. 그리고 극도로 보수적인 판사 셋을 트럼프가 지명하는 것을 도왔다. 트럼프가 지명한 자들은 상원의 인준을 받으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그들은 청문회에서 “판례”를 존중하겠다고, 즉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렇게 해서 공화당 우파는 연방 대법원의 9표 중 5표를 장악하게 됐고, 이를 이용해 결정타를 날렸다. 체제를 이용해 먹으려는 자들과 깨뜨리려는 자들이 모두 얼마나 가치없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다. 그들은 주(州) 수준에서 이미 게리맨더링[자기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구획하는 것] — 역재과 투표 역제 정책으로 공화당의 장악력을 키워 왔다. 반면, 민주당 정치인들은 무기력하고, 상대가 게임의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불멘소리나 해 왔을 뿐이다.

이번 결정의 둘째 측면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역 중 가장



낙태권 공격은 더 광범한 공격의 시작 단호하고 거대한 운동으로만 이를 저지할 수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세계 금융 위기가 낳은 고통은 지난 30년 동안 커져이 누적된 불만을 폭발시켰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트럼프뿐 아니라 유럽, 나아가 세계적 수준에서 전진하는 극우를 목도했다.

오래 재직한 우익 대법관 클라런스 토머스는 보충 의견을 제출하면서 다른 판례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거론한 세 판례는 각각 피임,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 결혼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2021년 1월 6일 미국 극우의 국회의사당 난입을 지지했다는 혐의로 아내가 조사를 받고 있는 토머스는 반혁명을 선포한 셈이다.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의 마이클 클라먼은 “클라런스 토머스가 원하는 것은 보수적이 아니라 급진적”이라고 지적한다. 1950~1970년대 연방 대법원은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는 여러 판결을 내렸다. 흑인의 평등권 요구에 손을 들어 준 여러 판결과 마찬가지로 ‘로 대 웨이드’ 판결도 당시 해방을 요구하며 미국과 전 세계를 휩쓴 거대한 대중 운동을 달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성과는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살아남았다. 1980년대 이래 주요국 정부들은 경제적 자유주의를 옹호했다. 이에 따라 자본이 이윤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은 제거됐다. 동시에 그들은 소위 ‘사회적 자유주의’, 즉 사람들이 사생활에서 누리는 개인적 자유를 존중하고 때로는 신장하기도 했다. 거대 기업과 은행들은 실제 경제적 불평등을 키우면서 기꺼이 입 발린 말로 평등과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찬양했다.

2007~2009년 세계 금융 위기는 이 모순을 산산조각 냈다. 그 위기가 낳은 고통은 지난 30년 동안 커져이 누적된 불만을 폭발시켰다. “체제를 깨뜨리려는 자들”에게 이는 기회였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트럼프뿐 아니라 유럽, 나아가 세계적 수준에서 전진하는 극우를 목도했다.

“체제를 깨뜨리려는 자들”은 1960~1970년대의 운동이 남긴, 진정으로 해방된 사회를 향한 여정에 제한적이거나 보탬이 된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려 한다.

게다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들이 있다. 미국의 자유주의 여론은 펜스를 떠받들어 왔다. 펜스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의 희망을 거슬러 바이든 당선을 인정해 줬기 때문이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낙태 금지 여부를 각 주가 결정할 사안으로 남겨 놓았다. 그러나 펜스는 전국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번 낙태권 공격은 적수만큼이나 가치없는 태세가 돼 있는 단호하고 거대한 운동으로만 저지하고 되받아칠 수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1호 / 번역 이원웅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VS 경찰 독립성?

경찰의 부패하고 폭력적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6월 27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행정안전부에 경찰청 지휘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조직에 대한 현 정부의 지휘·감독력을 높이려는 시도다. 마침 경찰 고위 간부 인사 반복 논란 끝에 현 경찰청장 김창룡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야당들은 정부의 조치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행안부 장관 이상민은 이전 정부들 시절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지휘한 것이 문제이고, 자신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을 지휘하려는 것이니 오히려 “정상화”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권력이 더 강화됐으므로 경찰에 대한 통제·지휘가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둘 다 참말이 아니다. 경찰은 거대한 치안·정보·수사기관으로서 체제 수호를 위해 물리력(“공권력”)을 행사하는 대표적 기관이다. 그 기능의 중요성과 조직의 규모, 실제 구실은 일반적으로 군대에 비견할 만하다.

경찰은 역대 어느 정부 하에서도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적이 없었다. 따라서 계급 간에 중립적인 적이 없었다.

선출된 정부라도 일상적 시기에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는 체제 수호라는 목적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책임을 진다. 청와대가 경찰을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로 운영하려 한 것만큼이나, 경찰도 청와대에 충성해 왔다. 정부 핵심부는 비공개 지휘를 통해서든, 행안부 장관-경찰위원회의 공식 계통을 통하든, 또는 정부 예산편성권을 통해서든 경찰의 인사와 재정제에 얼마든지 간섭할 수 있었다.

노동자 등 서민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다루는 것이 본 기능인 만큼 지배계급의 각종 편견이 그대로 조직 운영에 반영된다. 게다가 철저하게 상명하복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편견과 차별은 개별 경찰관들의 습성이 되기 십상이다.

서구 국가들의 경찰이 하나같이 인종차별적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미국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M) 운동의 급속한 국제적 확산에서도 드러났다. 한국에서도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치안은 다르다. 가난한 동네에 경찰이 많아질 때는 대체로 범죄 수



속죄양 바이든 방한 반대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들

배자를 잡으려고 대대적인 수색과 검문·검색을 실시할 때다.

경찰의 과잉 시위 진압, 가혹 행위를 동반한 수사, 노동자·서민에 대한 편파 수사, 공안 사건 조작 등도 사라지지 않는다. 권력층이나 조직폭력배와의 부패 고리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 정부가 경찰 통제를 강화하려는 저의를 폭로하는 것을 넘어 경찰의 독립성은 중요하게 다룰 가치가 아니다. 누구로부터의 독립성·중립성인가? 지배계급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비현실적

그래서 최근 윤석열의 경찰 통제 강화에 반대하는 정의당·진보당의 대안은 비현실적이기 짝이 없다.

경찰 문제는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을 분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것은 지방 경찰이었고, BLM 시위를 위협한 백인 극우 활동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반파시스트 활동가를 총격 살해한 것은 FBI(연방경찰)였다. 당시 앰네스티는 플로이드 사망 직후 열흘간 미국 전역의 항의 시위에서 과도한 무력 진압이 125건 일어났다고 보고했다. 소속은 연방과 지방, 군과 경찰들로 다양했다.

경찰 폐지 구호까지 나왔던 BLM 운동은 경찰의 소속을 구분하지 않았다. 경찰 자체의 기능과 성격이 더 본질적이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경찰 폭력으로 매년 약 1000명꼴로 사망하며, 흑인이 백인보다 피해자가 될 확률이 2배 높다고 보도했다.

2021년 런던에서 젊은 여성이 납치돼 성폭행·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런던시 경찰관이 방역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서는 야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문제의 항의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을 지시한 자는 최초 여성 런던경찰청장으로 유명했던 크레스이다 덕이었다.

한편, 경찰은 범죄 예방을 기치로 물리력을 통한 질서 유지(치안)를 맡는 기관으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기소를 맡는 검찰과 다르다. 그래서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치안 경찰)을 구분한다고 해도 경찰의 물리적 억압기관으로서의 성격, 편견과 폭력적 습성은 완화되지 않는다. 시위 진압 경찰과 시위 진압에 저항한 사람들을 뒤쫓는 경찰 사이의 차이를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새 서울경찰청장 김광호는 장애인들의 지하철 연착 시위를 물리적으로 진압한 뒤에 “불법 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놔다. 서울경찰청은 바이든 방한 반대 시위를 벌인 대학생진보연합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당시 반대 시위를 힘으로 제압했다.

진보당은 “경찰청장 직선제”를 주장했다. 기껏해야 경찰력 행사에 정당성만 부여할 뿐인 무의미한 구호다. 좀 더 하급인 ‘경찰서장 직선제’도 마찬가지다. 경찰의 계급편향적 폭력성이 개선됐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영국은 2011년 보수당 정부하에서 소요가 발생한 직후 잉글랜드 등지에서 자치경찰위원장(PCC)을 주민이 선

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15곳에서 노동당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지만, 이민자·난민·무슬림 등에 대한 경찰의 인종차별적 폭력은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런던 경찰의 여성 살해 사건을 두고 세상 물정을 몰랐다고 피해자를 탓한 인물도 노스요크셔에서 선출된 자치경찰위원장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 지휘권 강화의 핑계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 권한이 너무 강화됐다는 점을 든다(“민주적 견제”). 그러나 정작 경찰의 강화된 권한 자체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오히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에는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고도 했다.

새 정부의 조치로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더 간편하게 대통령-장관-경찰로 이어지는 직통 지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거꾸로 경찰이 체제 수호와 정권 유지에 기여할 바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경찰권 강화

서울경찰청장 김광호와 함께 윤석열 정부 초대 경찰청장 유력 후보의 하나인 경찰청 차장 윤희근은 고위 정보경찰 출신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 기능도 넘겨받기로 한 경찰이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차츰 강화할 태세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행안부 장관을 통해 검찰과 경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내부 숙정을 하고 있다. 경찰 통제 강화 과정도 이에 반발하는 친민주당 성향의 간부들을 숙아내는 데 이용된다.

초유의 세계적 복합 위기 속에서 집권한 우파 정부로서 위기의 고통을 노동계급 대중에 전가하려는 지배계급의 희망을 실현하려면, 윤석열 정부는 만만찮은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노동 개악 방안에 대해 윤석열이 아직 정해진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발뺌한 것은 바로 이 점을 의식한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각종 개악 실행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의 경찰 통제 강화는 개악에 대한 저항들에 억압적 국가기관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정비 작업의 일부다.

김문성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년간 지속하겠다는 나토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제국주의 열강(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 국경 안팎에서 전쟁의 다음 국면을 준비하고 있다.

6월 29~30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 하나는 동유럽 주둔 나토 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신청한 데 이어, 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가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의 회의 참석은 “중국의 도전”에 대처할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중국을 겨냥하는 나토의 새 ‘전략 개념’에 대해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 가령 프랑스와 독일은 중국을 겨냥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신중하다.

나토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시진핑은 푸틴과 공식 전화 통화를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이 통화에서 둘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6월 23일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가 열렸다. 브릭스 5개국 외에 13개국이 참석해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 과시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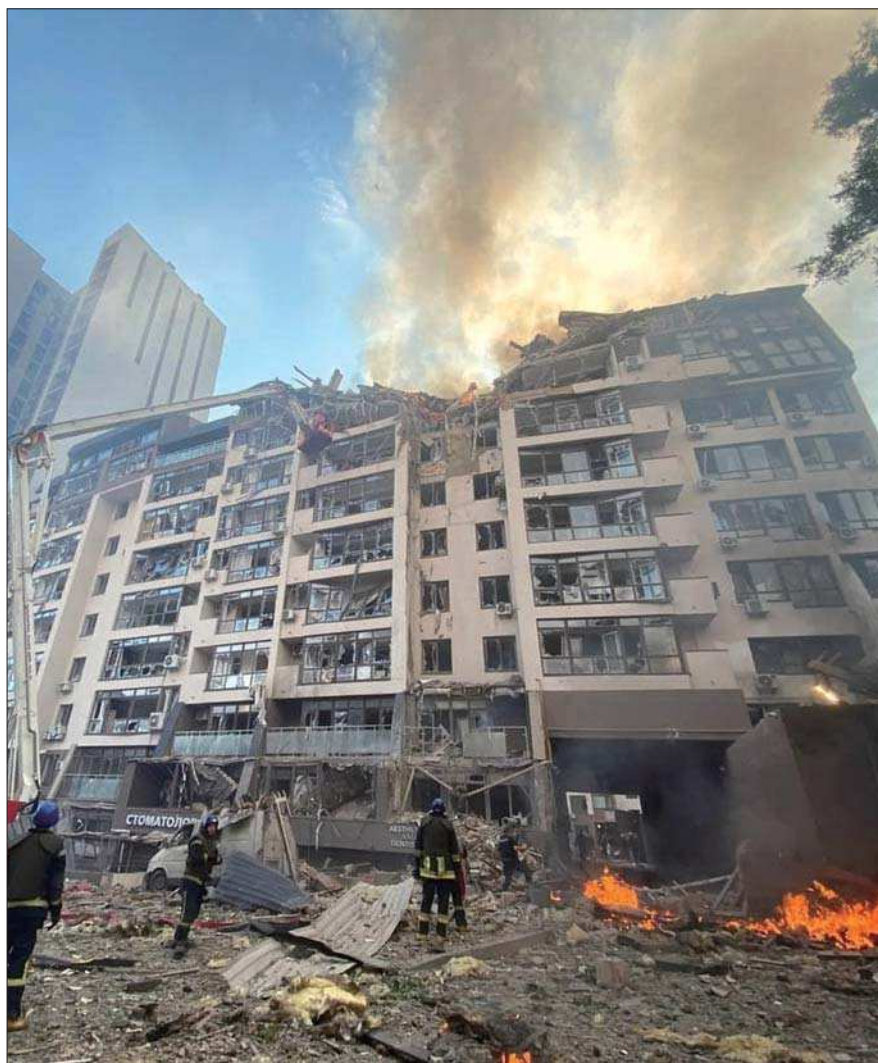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 제국주의적 경쟁을 격화시키는 열강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

‘고기 분쇄기’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1차세계대전 당시 지루한 참호전 속에 벌어진 ‘고기 분쇄기’ 전투와 점점 더 닮아가고 있다. 1916년 2월 독일군은 프랑스의 전략적 요충지 베르됭에 프랑스군의 전력을 집중시켜 한꺼번에 분쇄하겠다는 ‘고기 분쇄기’ 작전을 폈다.

이를 좌절시키기 위해 프랑스군도 베르됭에 막대한 화력과 병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했다. 이 전투로 10개월 동안 희생된 양군의 사상자는 70만 명에 달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겨우 수백 제곱미터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많은 병사들이 죽고 다친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은 사상자가 매일 1000명씩 나오고, 이 중 100~200명이 전사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몇 달째 공식적인 전사자 수 집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소모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등 나토가 채택한 전략은 “소모전”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군사력을 강화시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 장기전을 치르다 기진맥진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소모전을 지속하려면 병력과 화력이 끊임없이 뒷받침돼야 한다. 6월 15일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열린 ‘우크라이나 국방 연합그룹’ 3차 회의에서 미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 현황을 밝혔다.

“국제 사회가 거의 9만 7000기의 대전차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전 세계 전차 대수보다 더 많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탱크 200대를 요청했는데, 237대의 탱크를 제공받았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100대의 보병 전투 장갑차를 요청했는데, 300대를 받았다.”

‘우크라이나 국방 연합그룹’은 매달 정기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논의한다.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주재하고, 나토 회원국 30개국과 비회원국 약 20개국의 국방 당국자

들이 참석한다. 한국도 참가하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방차관 신범철은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의식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한국 정부에 무기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 국방 연합그룹’ 같은 “국제 사회”가 무기와 탄약을 보내어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키겠다고 말한다. 결국 전쟁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것은 미국과 나토이고, 이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치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은 미국과 나토가 보낸 무기로 러시아 제국주의와 싸우고 있다.

“전쟁이 수년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나토의 어려움은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만만찮다는 점이다. 덕분에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 어마어마한 포탄을 쏟아부고 있다.

6월 26일 돈바스 지역의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가 결국 러시아에 의해

함락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이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점령은 나토 측에 확전의 압력을 더 가할 것이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세베로도네츠크 함락 며칠 전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것[우크라이나 전쟁]이 수년 걸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비해야 한다.

“군사 지원뿐 아니라 에너지·식품 가격이 올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해선 안 된다.” (〈빌트〉 6월 19일 보도)

사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아무리 많은 무기를 지원해도 우크라이나군은 목숨을 건 방어 전투 이상을 할 수가 없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공세에 저항하다 밀려 퇴각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 방어선을 구축하고 반격하는 양상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더욱 생지옥이 돼 가고 있다.

6월 23일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유럽연합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는데, 우크라이나에 연대 메시지를 보내는 상징적 행동일 것이다.(물론 전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벌써부터 유럽연합 가입 협상이 10년 넘게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러시아가 굴욕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대선과 총선이 끝난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세자르 자주포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런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호해지고 있다. 2월 24일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가 잃은 영토를 수복하는 것? 돈바스 지방과 크림반도를 탈환하는 것? 러시아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묶어두는 것?

현재 서방 정부들에게는 이 질문에 대한 뾰족한 답이 없다. 그럴수록 전쟁은 장기화되고, 전쟁의 희생과 고통, 비용은 고스란히 노동계급과 보통 사람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전쟁의 참상, 전쟁이 극적으로 악화시킨 에너지·식량 위기, 양쪽 지배자들이 위기 대응책으로 채택한 금리 인상이 전 세계 노동자·서민을 덮치고 있다.

우리는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과 생계비 위기에 저항하는 운동을 건설하고, 그들을 서로 연결시키려고 애써야 한다.

김인식

성명 우크라이나 전쟁 확산, 중국과의 갈등 악화 도모하는 나토 윤석열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규탄한다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다. 윤석열은 나토 역사상 최초로 그 회의에 참석하는 한국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미국·나토와 러시아가 각각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유혈낭자한 소모전을 지속하는 가운데 열린다. 그리고 이 전쟁을 더한층 키울 방책이 결정될 것이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나토가 전투 대형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갖춘 병력을 30만 명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와 이를 주도하는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 지원을 쏟아붓고 있다.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미국이 중동 전쟁에서 겪은 수모를 만회하고 유럽과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다지기 위해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나토 회원국들은 군비를 증강하고 군사 동맹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핀란드·스웨덴의 가입으로 나토를 더 확장해 대(對)러시아 압박을 키우는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튀르키예[옛 이름 터키]가 반대하고 있어 두 국가의 나토 가입 협상은 이번 회의를 넘길 수도 있다.)



나토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대중 압박 강화에 협조하는 윤석열은 지정학적 불안정과 대중의 생활비 위기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나토의 대응은 전쟁을 멈추기 커녕 확산의 악순환을 부를 위험한 행위일 뿐이다. 나토의 압박이 러시아의 맞대응을 부르는 패턴을 우리는 거듭 목격해 왔다. 이 때문에 참혹한 전쟁이 계속될 뿐 아니라 세계적인 물가 급등이 더 심각해져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위태로운 지경이다.

이런 회의에 한국이 참석하는 것은 나토의 전쟁 개입이 폭넓은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정치적 효과를 낸다. 한국 정부는 이미 500억 원 규모의 군수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제3국을 통해 무기를 간접 지원하고 있다.

미·중 갈등 심화에 일조

미국·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물리치고 중국과 대결하려 한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는 새 ‘전략 개념’도 결정될 것이다.

대중 압박 강화는 나토가 아시아·태평양 국가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 정상회의에 초청한 핵심 목적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자신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군사 동맹 나토의 힘을 중국 압박에 동원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을 자극해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제국주의 갈등

이 더 첨예해지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미 일본과 한국 등의 나토 참가를 두고 미국과 중국은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다.

윤석열 정부도 이를 의식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반중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실제 행보를 보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서방 측에 힘을 실어주고 브뤼셀에 주나토 대표부를 설치해 향후에도 공조를 강화하려 한다. 미국 주도의 군사 동맹과 대외 전략에 더 많이 동참해 한국 자본주의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를 그리고 아시아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중의 생활비 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행보이다. 회의 참석 후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와 아시아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전략을 정치적·군사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결정을 들고 올 수 있다.

윤석열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규탄한다. 또, 한국이 제국주의 갈등을 더한층 부추길 미국의 행동을 지지하는 것에도 반대한다.

2022년 6월 28일
노동자연대

부산 도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홍보 활동을 하다

6월 26일 부산 도심의 서면 거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단을 요구하고 윤석열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를 규탄하는 선전전이 열렸다. 노동자연대 부산지회·울산지회 회원들과 지지자들이 선전전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전쟁 반대 배너와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활력 있게 선전전을 진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한다! 러시아군 철수하라! 나토 개입 반대한다! 한국의 전쟁 지원 반대한다! 한국의 나토 회의 참가 반대한다!”

주말 인파로 붐비는 서면 거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단을 촉구하고 한국 정부의 전쟁 지원을 규탄하는 리플렛을 반포하고, 확성기로 연설을 하기도 했다.

리플렛을 받은 청년들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비극을 어떻게 멈출 수 있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서방 제국주의의 위선을 꼬집는 주장을 유심히 듣는 시민들도 많았다. 한 청년은 한국 정부의 전쟁 지원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인 줄 알았으며, 전쟁 지원이 오히려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

확성기 마이크를 잡은 한 노동자 참가



6월 26일 부산 도심에서 진행된 우크라이나 전쟁 종단, 윤석열의 나토 정상회담 참가 규탄 선전전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높아지는 생계비 부담이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도 노동자 서민의 생계비 부담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임금을 깎고 공공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마당에 윤석열

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는 전쟁을 지속해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배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 정부의 전쟁 지원에 반대하는 활동을 발전시키자고 다짐했다.

정성희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원웅 (우크라이나 전쟁,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각축전) 공저자

이 기사는 6월 23일 열
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QR코드로 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대통령 윤석열이 6월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다. 한국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나토 역사상 처음이다. 한국 외에도 나토 비회원국 정상 여럿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일본·호주·뉴질랜드·스웨덴 등이 그런 국가들이다. 우크라이나 정상도 이 회의에 참석한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국가들의 면면은 이번 회의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확대를 위한 회의다. 한국 정부도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이번 회의는 나토의 새로운 '전략 개념'을 채택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러시아를 '전략적 적'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나토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불러 모은 이유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성격과 윤석열 참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우선 이번 회의가 열리는 중요한 배경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살펴보자.

나토 창설 이래 최고 군사령관은 늘 미국 장성이 맡았고 군비 지출도 미국이 압도적이다

(2018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4개월이 지났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실로 엄청난 야만을 몰고 왔다. 러시아군은 군·민간 시설을 가리지 않고 포격하고,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난민이 됐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제국주의적 충돌이라는 이 전쟁의 성격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전쟁 초 136억 달러였던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총 540억 달러로 늘어났다. 지난해 러시아 국방예산에 육박하는 규모다. 나토의 지원도 더 늘 것이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인들을 앞세워 러시아와 대리전을 벌이는 것이다.

〈노동자 연대〉신문은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서방의 제국주의 간 충돌이라고 지적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할 뿐 아니라 확전을 낳을 서방의 제재와 무기 지원에도 반대했다. 한국 정부가 이에 협조하는 것을 포함해서 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과 러시아의 충돌이라는 점은 강대국 간 직접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아직 전장은 우크라이나에 한정돼 있지만, 동유럽에는 많은

나토군이 전진 배치돼 있다.

물론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은 피하려 해 왔지만, 근본에서는 확전의 논리가 계속 작동했다. 승리를 위해서는 갈수록 더 강력한 무기, 더 많은 훈련과 인적 지원을 해야 했다.

서방이 지원하는 무기는 갈수록 위협적이고 그 사정거리도 길어져 러시아 본토를 위협할 수 있게 됐고, 이는 다시 러시아의 대응을 자극했다. 러시아가 소형 핵무기를 사용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서방 제국주의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의존도 커졌다. 전쟁이 무기와 물량을 끊임없이 퍼붓는 소모전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탄약 부족과 병력 손실을 미국이 계속 보충해 주기를 바란다.

소모전은 커다란 고통을 낳을 것이다. 양측 모두 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은 우크라이나 인구의 90퍼센트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심화된 문제 하나는 세계 곳곳에서 물가 상승,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로 노동자·서민이 생계 고통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쟁 비용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나토의 성격

우크라이나 전쟁이 낳은 또 다른 중요한 효과는 서방 제국주의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서방 국가들은 이 전쟁을 계기로 군비를 늘리고 있고, 나토의 결속력도 강화됐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입은 상처를 만회하고, 러시아를 굴복시킨 뒤 중국과의 대결로 나아가려 한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이다.

이 회의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나토의 역사와 성격을 간단히 살펴보자.

흔히 나토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합처럼 묘사된다. 그러나 나토의 역사는 그것과 거리가 멀다. 나토는 회원국 그리스의 1960~70년대 군사 독재를 용인했고,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지는 지독한 억압을 묵인한다.

나토는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회원국들의 연합인 듯한 외관을 하고 있지만, 본질은 미국 제국주의의 힘을 확대하고 투사하는 기구다. 나토의 최고 군사령관은 창설된 이래 죽 미군 장성들이 맡았다. 미국의 군비 지출은 나머지 나토 국가들의 총 군비 지출을 능가한다.

나토는 냉전 초기인 1949년 소련에 맞선 방어적인 군사 동맹을 표방하며 출범했다. 나토는 소련 블록을 견제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미국이 유럽의 동맹국

들을 결집시키는 수단이기도 했다.

미국의 패권 유지 기구라는 본질은 나토의 개입 역사에서 잘 드러난다. 아이러니하게도 나토의 개입이 두각을 보인 것은 냉전 이후였는데, 미국은 나토를 통해 1990년대 발칸 전쟁에 개입하고 나토를 동쪽으로 확대했다.

당시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폭격은 유엔 승인 없이 유엔 회원국을 공격한 것이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규칙 기반 국제 사회를 뒤흔드는 러시아와 '이를 지키려는 나토'의 대결처럼 그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나토의 발칸 전쟁은 미국과 나토도 '국제 규칙' 수호에는 관심이 없고 패권을 더 중시함을 보여 준다.

미국은 소련 붕괴 이후 동유럽 국가들로 나토를 확장해 러시아를 포위하는 동시에 유럽 국가들을 자기 지도력하에 묶어 두려 했는데, 이 정책은 이번 전쟁의 근원과 맞닿아 있다.

이처럼 나토의 확장을 제국주의 경쟁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소련 붕괴 후 약화된 러시아는 미국의 위협이 되지 못했다면서, 나토 확장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냉전에서 패배했어도 러시아는 여전히 방대한 자원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였다. 미국은 전략적 이익을 위해 옛 소련의 변경으로 진출했지만, 러시아는 기회가 되면 언제든 그에 대한 영향력을 되찾으려 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의미

미국 제국주의는 한동안 후퇴를 겪었다. 중동에서 벌인 전쟁은 수렁이 됐고, 미국은 2008년 세계경제 위기의 진양지였다. 반면, 국력을 다소 회복한 러시아는 조지아에서 전쟁을 일으켜 지역 영향력을 일부 회복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미국이 구축한 기존 동맹 체계를 흔들면서 서방의 결속은 최악으로 치달기도 했다. 2019년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나토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일갈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는 다시 활기를 얻었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회원국들을 결집시켰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는 기세를 몰아 두 가지를 강력하게 추진하려 한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을 결의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6월 15일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 만났는데, 그 뒤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베르그는 “동맹국들이 추가적인 지원, 특히 중화기와 장거리 체계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 동부에 배치된 나토 전투단을 강화하고 신속한 병력 증원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토의 ‘중심축을 전환’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나토의 중장기적 방향으로 정식화하고,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하려 한다.

윤석열 정부의 회의 참석은 나토가 추진하려는 이 두 가지에 힘을 보태는 것이다.

이것은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 확산에 일조하는 행위다. 이미 한국 정부는 500억 원 규모의 군수 물자와 의약품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캐나다에 포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무기를 간접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통해 확산 추세가 강화되면, 전술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위협이 더욱 증대할 것이다. 또한 전쟁의 지속은 물가 폭등으로 인한 전 세계 노동자·서민의 고통을 심화시킬 것이다.

둘째, 윤석열 정부가 나토의 새 전략 개념을 지지하는 것은 아시아의 긴장을 증폭시키는 데 일조하는 행위다. 6월 12일에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에 오고 간 험악한 말들은 둘 사이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대만 문제를 놓고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면 한국은 직접적으로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처지다.

윤석열 정부는 제국주의 전쟁에 동참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 한다. 그러나 이는 세계와 아시아 모두를 더 큰 위협에 빠뜨리고,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의 생계를 위기에 몰아넣는 것이다. 윤석열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를 규탄하고 반대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확산에 일조하는 윤석열 정부



500억 원 규모
군수물자 지원



제3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지원

반전운동의 쟁점과 과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국제 반전운동 내에서는 첨예한 논쟁이 벌어져 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특히 무기 지원을 둘러싼 논쟁이 첨예하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국제적으로 개혁주의자들은 미국과 나토의 전쟁 지원을 지지하거나 침묵하고 있다. 미국의 오키시오펜코르테스로 대표되는 좌파 의원들, 영국 노동당 좌파 등이 그런 입장이다. 한국의 정의당도 서방의 개입을 비판하지 않고, 윤석열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비판하지 않고 있다.

애초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반대하지 않던 참여연대 등 주요 NGO와 민주노총은 최근에는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일부 활동가들은 ‘그렇다고 러시아와 싸우겠다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무기 지원을 반대할 수 없다는 고민에 빠져 있다.

이런 논쟁의 근원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 문제가 있다. 현재 전쟁이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교전이라는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 전쟁을 제국주의 간 충돌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전쟁의 핵심이 우크라이나인들의 자결권이라고 강조한다. 대리전이라는 규정은 우크라이나인들의 능동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국제적으로 급진좌파 일부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사회진보연대가 대표적으로 이런 입장이다. 사회진보연대는 무기 지원도 지지한다.

그러나 이 전쟁을 대리전이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말은 아니다. 과거 대리전들에서도 대리자 구실을 한 세력은 모두 나름의 이해관계와 능동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서방의 영향력이 결정적인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물론 혁명가들은 민족 억압에 반대하고 억압받는 민족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것은 민족의 분리·독립을 포함한 자결권이 절대선이어서가 아니라 국제 노동계급을 단결시키고 제국주의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점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또 다른 억압을 낳거나 제국주의를 강화시키는 민족

주의 운동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제1차세계대전 당시 영국·프랑스·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항해 독일 제국주의와 손잡은 폴란드 민족 운동이 그런 사례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서방 제국주의의 대리자 구실을 수행하고 있다. 그들의 승리는 결국 서방 제국주의를 강화시켜 전 세계를 더 위험한 충돌로 이끌 것이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전쟁을 지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확전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인들 자신이다.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소모전 속에서 죽어 나가더라도 이 기회를 이용해 러시아를 굴복시키려는 것이다.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해서 말이다.

두 제국주의 모두에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현재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좌파들의 취향성 때문이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참을성 있게 원칙 있는 반제국주의 저항을 건설해야 한다. 특히 자국 정부의 전쟁 지원에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확산 추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전술 핵무기 사용 대두 같은 심각한 사태 전개가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신속하게 반전운동을 확대하도록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식량 위기와 서민 생계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현재 스리랑카 등지에서 저항이 벌어지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한국에서도 유가 인상에 항의하는 화물연대 파업이 벌어졌다. 미국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한 반발로 러시아 제재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혁명가들은 반전운동과 생계비 위기에 대한 불만을 연결시켜야 한다. 노동계급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는 것, 전쟁 지원이 노동계급의 생계에 대한 간접적 공격이라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며 원칙 있는 전쟁 반대 입장으로 반전운동의 기반을 다지고, 사태 전개의 변화를 주시하며 운동을 확대할 기회를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의 물가 대책

자본가 이윤 보호하러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

최근 기획재정부장관 추경 호는 7~8월 물가상승률이 6퍼센트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보면, 그들이 진정 걱정하는 것은 노동자·서민의 삶이 아니라 기업 이윤이다.

정부는 “시장 친화적 물가관리”를 하겠다고 밝혀 왔다. 기업들을 규제해 물가 통제를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 물가 상승의 원인은 코로나 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원자재·에너지 등의 가격이 오르자, 기업들이 이윤을 늘리려고 상품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서민이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데도 기업 이윤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유 회사들은 국제 유가 인상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떠넘겨 막대한 이윤을 거두고 있다.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쓰오일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하고, SK이노베이션은 2분기 연속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낼 전망이다.

정유사들이 소비자에게 가야 할 유류세 인하 혜택의 일부를 빼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용혜인 의원실(기본소득당)의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휘발유 유류세가 리터당 164원 내렸지만, 올해 3월까지 소비자 가격 하락에 반영된 것은 67.6원뿐이다. 마찬가지로, 경유 유류세는 리터당 116원이 내렸지만, 소비자가는 55원만 하락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유사들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라면·햇반·소주 등도 가격이 올랐는데, 올해 2분기 농심·오뚜기·하이트진로 등의 순익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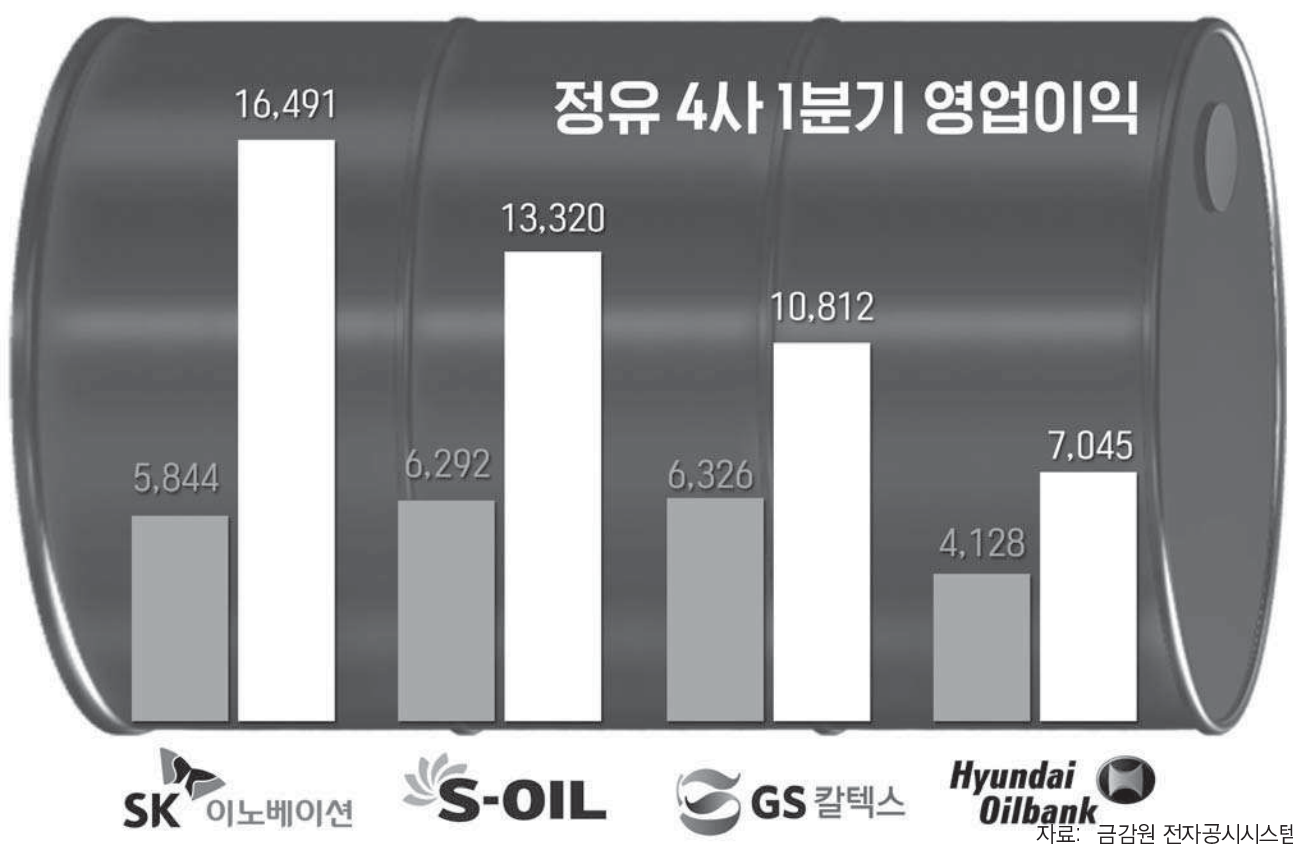
기업 이윤 보호를 위해 “시장 친화적” 정책만 내놓다 보니, 기업의 금고는 두둑해지지만 보통 사람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가스비 인상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수익성 논리를 앞세워 공공요금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전기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정부는 한 분기에 킬로와트시당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는 정유사들



3원 이하로 올리도록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 올해 3분기에는 전기 요금을 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했다. 4인 가족의 월 평균 전기세가 1700원 인상되는 것이다. 한전은 이번에 올린 것보다 6배(4인 가족 1만 원)는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도 올해 4월 1.8퍼센트, 5월 8.4퍼센트가 오른 데 이어, 7월에 또 7.3퍼센트가 오른다.

정부는 사립대 등록금 인상도 허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사립대학 재단·총장들이 투덜거리자 규제를 풀어 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또,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떨어질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부양책들을 내놓

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고, 보유세·양도세를 감면하겠다고 한다.

환율이 달러당 1300원에 육박해 수입 물가 부담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환율이 수출 기업들에게 득이 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의 여파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법인세를 25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감면해 기업들의 이윤을 더욱 보조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토 지원에 동참하며 전쟁이 계속 악화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전쟁의 지속은 물가 폭등으로 인한 전 세

계와 한국 노동자·서민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일인데도 말이다.

이처럼 기업 이윤에는 손대지 않고 수익성을 앞세워, 공공요금까지 올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확산 추세에 일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물가 상승을 막으려면 임금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금 상승이 물가 인상을 낳는다고 말이다.(이것은 엉터리 경제 이론에 근거한 주장이다.)

정부는 직무급제로 임금 체계 개악, 노동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억제로 전반적인 임금 인상 요구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한다.

그러나 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을 낳고 있다는 근거는 없다. 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간신히 추격하고 있는 수준이다. 오히려 저소득 노동자 임금은 물가만큼 오르지 않아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다.

월급 빼고 다 올라서 노동자·서민들은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노동자·서민이 아니라 기업들이 물가 상승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특히 생필품 물가 상승을 억제해야 하고, 노동운동은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범하게 연대해서 대차게 싸워야 한다.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올해 5월 1일 노동절 집회

정의당,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 금리 인상 반대하지 않기

노동계급의 생활고에 왜 이리 무심한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생계비) 고통이 심각하다. 특히, 유가가 크게 치솟아 부담이 크게 늘었다. 기름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 서민층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대중적 바람이 크다.

그런데 노동자와 약자를 대변한다는 정의당이 우려했듯 유류세 인하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탄소배출을 늘리는 나쁜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장혜영 의원도 유류세 인하가 탄소 중립 정책에 역행하고, 저소득 가구보다 고소득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진보당도 비슷한 논리로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이다.) 유류세를 내릴 것이 아니라 여객·화물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유류세가 간접세로서 부과 단계에서 이미 소득 역진성이 있음을 무시하는 단견이다. 그래서 기름 소비가 늘어날수록 유류세 감면 액수는 커지지만, 소득 대비 유류세 감면액 비중은 가난할수록 더 크다.

그래서 가격 인상을 통해 수요를 줄인다는 시장 방식 수요 조절책의 핵심 문제는 가난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고, 부자는 소비를 지속한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징벌적 규제다.

물론 소수 빈곤층에게 보조금을 주는 보완책이 있겠지만, 여전히 노동계급 대다수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방식은 기후 문제에서도 정의에 역행하는 방안이다.

기후 위기의 책임은 대기업 소유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에게 있다.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화석연료와 핵발전의 의존해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하고, 거기서 이윤과 권력을 누린 것은 그들이지, 노동자·서민들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고작 기업 11곳(철강, 정유, 석유화학, 반도체 등)의 배출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4퍼센트를 차지한다. 그 결과는 막대한 이윤이었다. 정부는 “탄소 중립” 운운하면서도 기업 이윤을 우선하며 화석연료 기반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기름값이 치솟자 미국과 서유럽 정부들도 기업들에게 석유·가스 생산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면, 그들도 기후 위기를 막는 것보다 자국 기업의 이윤 보호를 더 신경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단결해 싸울 요구를 내놔야

노동자·서민들에게 고유가로 말미암은 부담을 떠넘기는 방안은 그 자체로 정의롭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위기의 고통 전가에 맞서는 운동을 대중적으로 만들 기회를 차단한다.

노동계급은 기업주들의 이윤 논리(그리고 이와 연결된 정치 권력자들에)도 전할 잠재력이 있다. 그런 잠재력은 인간의 필요보다 이윤을 우선하는(그래서 기후 위기와 불평등을 초래하는) 체제를 변화시키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름값 인상을 통해 노동계급의 소비를 줄이자는 주장은 주역이 돼야 할 노동자들을 이반시켜 변화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유류세 인하운동이 노동계급의 삶을 지키는 운동인 동시에 기후 운동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은 2018년 프랑스에서 벌어진 노란조끼 운동이 잘 보여줬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부유세는 인하하면서 간접세인 유류세는 인상했고, 부자들을 대변하며 빈곤과 불평등, 저임금을 심화시킬 정책들을 추진했다.

이에 맞서 노란조끼 운동은 수십만 명이 도로 봉쇄 시위를 벌이며 전투적으로 항의했다. 수주간의 투쟁 끝에 마크롱 정부는 결국 유류세 인상을 철회했고, 연금 개악도 미뤄야 했다.

노란조끼 시위 참가자들은 옹게도 서민 세금 올린다고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위대 내에서는 “부자들이 생태적 전환에 필요한 돈을 내게 하라”는 구호가 나왔다.

화석연료에 종속된 지배자들을 물러서게 하려면 노란조끼 운동 같은 대중적 투쟁을 전진시켜야 한다. 장혜영 의원은 유류세 인하로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을 걱정했지만, 다수인 노동계급의 생활고 저항을 고민한다면 간접세인 유류세는 인하하고, 부자·기업주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자고 촉구하는 대중 행동을 호소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의 위기 노동계급과 괴리된 노동자 정당?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치솟는 금리 때문에 많은 노동자·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정치인들은 대부분 이 문제를 나몰라라 한다. 정의당 정치인들조차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진보당도 정부의 기준 금리 인상에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시중은행들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며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대선 후보 시절, 물가를 잡고 거품을 관리하려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대선 다중채무자·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제는 늘려야 한다고 했다. 최근 장혜영 의원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자영업자 지원과 부채 관리 강화에 초점을 뒀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치솟는 금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하는 사람은 단지 다중채무자나 소상공인만이 아니다.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수억 원씩 빌린 노동자와 서민이 많다. 게다가 생활비를 보충하려고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다.

금리가 3퍼센트포인트 오르면 3억 원을 빌린 사람들은 연간 1000만 원 가

까운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이처럼 금리 인상은 노동자·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때로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인데도 정의당은 이런 사람들의 고통에 너무나 둔감하다.

정의당 정치인들이 이런 둔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노동계급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보다 부채 위기로 위태로운 한국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일을 우선시하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는 장기침체의 대가를 노동계급 대중에게 전가하며 버티고 있다. 금리 인상은 많은 돈을 빌려준 자들과 부자들을 위한 위기 대처법이다. 그러므로 안정적으로 위기를 관리할 역량(기성 체제에 대한 책임성)을 보여야 한다는 압력에 순응할수록 노동계급·서민층의 고통 해결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최근 정의당의 위기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계급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에서 정의당 정치인들이 취하는 태도를 보면, 위기의 원인을 먼 데서 찾을 일이 아닌 듯하다.

정선영

에너지 위기 상황 이용해

핵발전 늘리고 전기료 올리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주최로 에너지 정책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밝힌 에너지 정책 내용은 인수위 시절 내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포장이 바뀌었다. 당시 강조점이 에너지 정책 ‘정상화’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에너지 안보’를 크게 강조했다. 위기 상황임을 이용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 대처하려면, 핵발전 확대와 전기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도 에너지 안보라는 새 부대에 담겼다.

산자부는 이번 공청회를 위해 사전에 공개한 자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영국·프랑스 등이 핵발전을 추가하거나 폐로 계획을 선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석탄 발전을 계속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됐다.

이런 사실은 불과 반년 전에 이들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 말과 약속이 얼마나 공허하고 위선적이었는지 보여 준다. 이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대리전을 조기에 끝낼 생각이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윤석열은 이처럼 주요 선진국 정부들도 핵산업과 화석연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상황에서 이 나라에서 탈핵이니 탈석탄이니 하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한 셈이다.

에너지 안보?

한편, 에너지 안보를 내세워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전기요금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을 정당화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 ‘탈원전’ 정책이 (전기 공급을 줄여) 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면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을 동시에 백지화하겠다고 했다. 이는 핵발전을 선호해 온 우파와 값싼 전기로 이익을 누려온 기업주들의 바람을 대변한 것이었다. 또 문재인인의 전기요금 인상엔 정당한 불만을 느낀 사람들의 표도 얻어보려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윤석열은 에너지 위기의 비용을 노동계급에 전가하려 한다 핵발전소 건설 기업인 두산에너지빌리티를 방문한 윤석열

그러나 당선 후인 4월에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을 용인한 데 이어 6월 27일에는 윤석열 정부가 직접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동시에 올렸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고 환율도 오르는 상황에서 공기기업인 한전의 적자가 계속 늘어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필수 재화의 공공요금 인상은 그 자체로 노동계급 사람들의 생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연쇄적인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들 것이다.

윤석열은 이에 대한 불만이 항의나 저항으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에너지 안보’라는 명분을 강조하는 것이다.

고통전가에 맞서야

물론,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기업주들의 부담도 커진다. 하지만 기업주들은 일부는 가격 인상으로, 다른 일부는 노동비용 절감 즉, 노동조건 공격으로 이를 해소하려 할 것이다.

윤석열은 이런 시도를 뒷받침함으로써 기업주들의 불만을 달래려고 한다. 주52시간제 개악 등 노동조건 공격을 예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생필품 가격 앙등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정유사와 민간 발전사들이 이로부터 큰 이익을 보고 있다. 한전은 적자를 줄인다면

자산 매각(민영화)과 인력 구조조정 등을 예고했다.

한전 적자가 커진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민간 발전사의 수익을 보장하도록 고안된 발전 단가 책정 방식에 있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통제하기는커녕 더 많은 민간 발전사가 시장에 진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서도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이 강조됐다.

현대기아차 등 국내 대기업들은 자체 LNG발전소를 지으려 한다. 일차 목표는 유럽과 북미의 탄소국경세 등 무역 규제를 피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전력 시장 개방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려고도 할 것이다. LNG발전은 가동과 정지가 상대적으로 신속해 전력 공급이 부족할 때 전력을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민간 발전소가 늘어나면 정부의 가격 통제 능력은 약화되고 기후 위기 대응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이다.

기후 위기 대응 — 눈 가리고 아웅하기

윤석열은 대선 당시와 달리 집권 이후에는 전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이는 괜한 논란을 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인

감축 수단 마련”, “실현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믹스” 등에서 “현실적”, “실현가능” 등의 표현은 우파와 기업주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 ‘선회’를 강조한 것도 같은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일부 경제지는 이번 공청회에 찬핵론자를 패널로 초대하지 않았다며 산자부 관료들이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것 아니냐고 엄살을 부렸지만, 책략일 뿐이다. 이날 공청회는 윤석열의 기존 에너지 정책을 재천명하는 동시에 공청회라는 형식을 빌어 정책 추진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물가 폭등과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고통을 전가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투쟁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물가를 통제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다. 최근 유가가 폭등한 독일에서는 철도 요금을 대폭 인하했다. 불만이 폭발할까 봐 양보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가능하다. 정부가 팬데믹 시기에 마스크 등 필수 방역 물품 가격을 통제했듯이 말이다. 법을 바꿀 필요도 없다.

화물연대 파업이 보여 줬듯, 불만이 크기 때문에 이를 대변해 단호하게 행동하면 큰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장호중

사용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동안 택배 노동자 또 과로사!

택배사는 인력 충원 약속 이행하라

지난 6월 16일 또 한 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안타깝게 사망했다. 올해 들어 택배 노동자 4명이 과로로 사망하거나 쓰러졌다.

1년 전인 2021년 6월 15~16일,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4000여 명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 인력 충원,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당시 투쟁의 성과로 전국택배노조는 사용자들, 정부·여당과 사회적 합의를 맺었다. 분류 인력을 충원해 올해 1월 1일부터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에서 손을 떼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간을 최대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으로 단축하고 고용 안정과 대리점주의 횡포 금지를 담은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택배 사용자들은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이른 아침부터 출근해 늦은 밤까지 일해야 하는 실정이다. 택배사들이 인건비를 아끼려고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최근까지 과로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월 초 전국택배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58명 중 64퍼센트



6월 23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올해 초 파업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올해 과로사가 발생한 택배 터미널에는 분류 인력이 아예 투입되지 않았거나 투입됐더라도 인원과 작업 시간이 부족하다는 유사점이 있다.

6월 16일 과로사한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도 분류 작업을 해 왔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을 평균

12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한다.

눈 가리고 아웅

그런데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점검·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택배사들에 면죄부를 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말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 "[택배사들이] 합의사항을 양호하게 이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노동자들은 국토교통부가 사측에 현장 방문 날짜를 미리 알려 주는 등 ‘눈 가리고 아웅’ 식 조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CJ대한통운과 우정사업본부 사용자 측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기는커녕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공격도 감행한 바 있다.

올해 초 CJ대한통운은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과 강도를 높이는 당일 배송을 강요하려 했다. 이에 반발해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은 65일간 파업을 벌여 저지했다.

얼마 전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에게 해고와 징계를 쉽게 하는 내용의 계약서 체결을 강요하려다가,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파업 태세에 나서자 철회했다.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몽그적거리고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택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에만 혈안이 된 때문이다.

전국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이들 투쟁에 지지를 보낸다.

신정환

중대재해처벌법

구명승승 법도 못마땅해 추가 개악하려는 정부·여당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 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경총이 정부에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에 응답하는 것이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 축소, 사용자 책임과 처벌의 완화, 사고 후속 조치의 완화 등을 요구했다. 법 개정으로 국회에서 논란을 빚기보다는 손쉽게 시행령을 개악해서 규제를 완

화하자는 것이다.

6월 17일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대출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용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자는 내용이다.

4퍼센트

한 해 2400여 명이 사망할 정도로 한국에서 중대재해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기업들의 무한 이윤 경쟁 속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의 개악안은 이런 사용자들

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도 허점이 많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누더기가 됐고,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시행령도 개악했기 때문이다.

한 예로 현행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6월 22일까지 산재 사망사고가 247건이나 벌어졌지만,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고작 81건(33퍼센트)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단 11건(4퍼센트)

에 불과했다.(고용노동부)

이런 법조차도 정부와 사용자들은 이윤 추구에 거주장스럽다고 느끼고 못마땅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개악 시도는 기업주들에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 추구에 더 몰두하라는 신호다.

최근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경제 상황이 이번 공격의 배경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온갖 반노동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의 만만찮은 저항이 필요하다.

김지태

노동자연대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join



workerssolidarity.org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workerssolidarity.org/what-we-stand-for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10-6491-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wspaper_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wspaper.org/online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일하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채널 바로가기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시사/이슈 토크
- 135개 다양한 쟁점을 다룬 맑시즘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새 코너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기후 정의,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 탈성장과 핵발전 등
총 10회에 걸쳐 기후 위기 문제와 운동 내 쟁점을 다룹니다.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월당리동
946-64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2 7

이스라엘의 점령지 확대와 팔레스타인인의 저항

6월 24일, UN은 지난달에 숨진 알자지라 기자 아부 아클레가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이를 부인했지만, CNN,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서방 주류 언론들조차 이스라엘군에 책임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했던 아부 아클레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제논에서 이스라엘군의 체포 작전을 취재하다 머리를 저격당해 즉사했다. 이스라엘군은 올해에만 70명 가까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살해했다. 이 중에는 어린이도 포함돼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살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이스라엘군이 벌이는 대대적인 체포 작전의 배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격적인 불법 정착촌 건설

6월 25일 발표된 이스라엘의 평화 단체 피스나우의 조사를 보면, 지난해 6월 출범한 나프탈리 베넷 정부하에서 서안지구와 예루살렘의 불법 정착촌 착공 건수는 전임 네타냐후 정부 때보다 62퍼센트 증가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2025년까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의 정착민 인구를 현재 47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불법 정착촌 건설은 미국 트럼프 정부 때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등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강경 우파와 정착민들에게 힘을 실어 줬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셰이크 자라 지역에서 자행된 팔레스타인인 강제 퇴거 시도는 지난해

5월 팔레스타인인들의 대규모 저항을 촉발했다.

셰이크 자라의 팔레스타인인들은 1948년 '나크바'(이스라엘이 자행한 인종 청소의 대재앙)를 피해 예루살렘에 재정착한 난민들이다. 이스라엘은 이들을 비롯해 서안지구 곳곳의 팔레스타인 마을을 공격하고 이들의 주거 시설이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철거를 밀어붙여 왔다. 동시에 불법 정착민들이 저지르는 살해와 방화, 위협은 눈감아 줬다.

지난달 이스라엘의 고등법원은 서안지구 내 팔레스타인인 마을인 마사페르 야타의 철거를 승인했다. 이 때문에 1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집을 잃고 쫓겨날 처지에 내몰렸다. 1967년 이후 최대 규모의 팔레스타인인 추방 조치다. 마을터는 이스라엘군의 사격 훈련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응해 팔레스타인인들도 최근 몇 달간 이스라엘군과 민간인들을 공격해, 지금까지 19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의 공격을 빌미로 서안지구에서 대대적인 체포와 공격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강력해 보이는 이스라엘도 안팎으로 만만찮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스라엘의 자본주의와 첨단 기술 경제

우선 이스라엘 자본주의는 외부의 막대한 지원 없이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다.

1948년 팔레스타인인들을 인종청소·추방하고 건국된 이스라엘은 태생부터 제국주의 세력의 후원에 의존했다. 당시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국에 친화적인 세력을 뒤서 중동 일대에 제국주의적 영향력을 행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불법 정착촌

사진 출처: Ahmed Abu Haneeda

사하려 했다.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와 여러 차례 전쟁을 벌인 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제국주의 세력의 후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1951년 이스라엘의 유력 일간지 <하레츠>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경비견이 돼야 한다. 아랍 국가가 미국과 영국의 희망을 거스른다면 이스라엘은 그런 아랍 국가에 대한 공세 정책을 기꺼이 도맡을 것이다.” 당시 이집트의 나세르가 집권하며 서방 제국주의를 위협하자, 이스라엘은 서방의 석유 이익을 지켜 줄 책임자로 보였다.

미국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자, 이스라엘은 미국의 경비견 구실을 하며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았다. 특히 미국의 군사 원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첨단 기술 분야가 이스라엘 자본주의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다. 1965년 이스라엘 산업 생산의 35퍼센트에 불과하던 첨단 기술 산업은 2006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70퍼센트에 이르게 됐다.

이스라엘은 꾸준히 막대한 자원을 군사 안보,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했다. 이는 미국의 중동 지배 질서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중요한 구실을 한 덕분이었다. 이웃 아랍 국가들에 대한 이스라엘 ‘군사력의 질적 우위(QME)’는 매년 수조 원에 이르는 미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생존하려면 미국 제국주의의 협력과 원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2011년 ‘아랍의 봄’ 혁명으로 서방 제국주의의 중동 지배가 도전 받고,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동아시아로 시선을 돌리자, 이스라엘의 지배자들은 불안해 하기 시작했다.

지배자들의 ‘아브라함 협정’ vs 중동 대중의 반란

이런 상황에서 집권한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다른 친미 아랍 국가들을 동맹으로 묶고자 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군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려 한 것이다. 이스라엘과 공공연히 관계 맺기를 꺼리던 아랍 지배자들도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한 상황에 대처하고,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억누르



지난 5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기자 아부 아클레 살해 항의 시위

기 위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2020년 9월, 이스라엘은 미국 백악관에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과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고 수교하는 데 성공했다. 모로코, 오만, 수단 등도 잇따라 이스라엘과의 수교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스라엘과의 민항기 개통 등을 발판으로 국교 수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친미 국가들을 동맹으로 묶어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 이란과 러시아 등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친미 아랍 지배자들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스라엘도 인근 아랍 국가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자신의 안보를 공고히 하려 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팔레스타인 대중의 거대한 저항에서 드러났듯이, 상황

은 지배자들의 셈법대로만 전개되지는 않았다. 수십 년간의 분열 지배 전략과 점령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내부의 저항을 무력화시켰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인티파다’로 불릴 만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은 이 자신감에 균열을 냈다.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의 지도부였지만 이제는 서안지구의 통치자가 된 파타 등은 이스라엘과의 협력과 부패로 팔레스타인 대중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더 최근까지 저항을 지속했고 가자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하마스의 인기도 예전 같지 않다. 근본적으로는 이 두 세력이 추진해 온 전략, 이스라엘과 타협해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운다는 ‘두 국가 해법’이 실현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일한 해법은 팔레스타인인과 유대인이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민주적이

용어설명

인티파다

아랍어로 “봉기”, “반란”을 뜻하는 말로, 팔레스타인인들이 1987년과 2000년에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이스라엘의 점령에 맞서 일으킨 봉기를 가리키기도 한다.

고 세속적인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국가를 수립하려면 태생부터 정착민 식민주의 국가로 탄생한 이스라엘 국가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5월의 저항은 이스라엘에 맞설 새로운 저항의 세대를 탄생시켰다. 이들은 전통적 저항 세력의 바깥에서 자발적인 조직을 만들어 저항에 나서며 잠재력을 보여 줬다.

팔레스타인 내의 저항 움직임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식량·물가 위기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반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예컨대, 군부 지배에 맞서 2019년에 시작된 수단의 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다. 6월 16일에 튀니지에서는 최대 노동인 튀니지노동총연맹이 벌인 총파업으로 항공편과 철도 노선 등이 멈추고 전국이 마비됐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점령을 공고히하는 한편, 주변 아랍 지배자들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정착민 식민주의 국가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팔레스타인 대중과 아랍의 노동계급은 “빵, 자유, 사회 정의”를 외쳤던 ‘아랍의 봄’ 혁명 당시의 힘을 보여 주기 시작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팔레스타인 해방의 희망이 놓여 있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파괴된 가자지구



미 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평범한 여성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이 참가하는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정진희

이 글은 6월 26일 본지 웹사이트에 실린 기사를 일부 수정·보충한 것이다.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5월 초 유출된 대법원 판결문 초안 그대로였다.

이제 미국에서 낙태는 헌법적 권리가 아니게 됐다. 낙태 허용 여부와 범위는 각 주의 법에 맡겨진다.

대법관 9명 중 5명이 미국에서 거의 50년간 유지돼 온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는 데 찬성했다. 반대는 3명이었다.

'로 대 웨이드' 판결과 상충하는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법(임신 15주 이후 낙태 거의 모두 금지)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6대 3으로 '유지'를 결정했다.

보수 성향 판사 6명은 모두 공화당 대통령들이 임명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수많은 여성들의 생명이 위협받게 됐다. 낙태 금지로 안전하지 못한 낙태를 하다가 죽거나 치명적 부상을 입는 여성들이 생길 것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 자동으로 낙태를 금지할 수 있는 '트리거법'을 통과시킨 주가 13곳인데, 오하이오와 아칸소 주 등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24일부터 낙태 클리닉이 문을 닫았다. 아이다호·노스다코타·텍사스 주는 대법원 판결 30일 뒤부터 낙태가 불법화된다.

낙태권을 옹호하는 미국 구트마허연구소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폐기되면 약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은 낙태하러 주 경계를 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추진하려 한다.

우파들은 낙태권 판례 폐기라는 중요한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더한층의 공격을 벌일 태세다. 우파 대법관 클라렌스 토머스는 낙태권 판례 폐기에 찬성하면서 피임, 동성 성관계·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룬 판례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태 반대 단체들은 낙태 금지를 주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분노한 사람들이 즉시 항의 행동에 나섰다

차원을 넘어 연방 정부 차원에서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낙태 금지로 가장 타격을 받을 사람들은 노동계급 여성이다. 가난한 여성들은 낙태가 허용된 주로 가는 데 들어갈 경비를 마련하기 힘들고,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휴가를 내기도 힘들다.

낙태 반대 단체들의 지도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환호하며 트럼프를 찬양했다.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판사 6명 중 3명을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했다.

트럼프 정부 때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는 대법원 판결을 칭송하며 "오늘 생명이 승리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낙태 금지로 여성들이 겪을 위험을 아랑곳 않는 자들의 위선과 광기에 동조하는 미국인은 소수다. 대법원 판결 이후 CBS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9퍼센트가 대법원 판결에 반대했다.

반격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분노한 사람들이 즉시 항의 행동에 나섰다. 수백 명이 대법원 앞에 모여 "내 몸은 내 것이다"라고 외치며 항의했다. 시카고, 필라델피아, 덴버,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시애틀, 뉴욕, 플로리다, 미주리, 조지아, 텍

사스 등 많은 주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자신들에게 투표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상원에서 법안 통과에 충분한 다수가 되면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에 투표하는 것으로는 낙태권을 방어할 수 없다.

민주당은 대선 때 여러 차례 낙태권 입법을 약속했지만 당선 뒤에는 번번이 공약을 어겼다. 바이든은 취임 뒤 낙태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선거를 의식해 낙태권 지지를 말했을 뿐이다.

대중의 삶이 악화되면서 바이든의 지지율은 매우 낮다. 취임 500일 때의 지지율이 같은 시기 트럼프 지지율보다 더 낮고 물가 급등 등으로 최근 더

떨어졌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우파와 보수파의 낙태권 공격이 점차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민주당의 무기력과 기회주의 덕분이었다. 민주당은 우파에 양보해 낙태 접근권 악화에 일조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집권은 민주당 오바마 정부가 개혁 염원을 배신해 대중의 환멸을 자아낸 결과였다.

우파의 공격에 맞서 낙태권을 방어하고 확대하려면, 노동계급의 여성과 남성이 참가하는 대중 투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낙태권 운동이 강력해지려면 민주당에 의존하지 않고 대중 운동 건설을 중심에 놓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한미 반도체 동맹, 순탄할까?

7월 7일(목) 오후 8시 **발제 강동훈** <노동자연대> 기자

참가신청 bit.ly/0707-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